

민간인 김종익 사찰 건으로 본 이명박 정부

김동춘

1.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한의사는 환자의 얼굴색만 봐도 몸의 어느 구석에서 탈이 났는지 진단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일을 볼 때 하나를 갖고서 열을 알 수 있고, 예외로 보이는 작은 현상을 보고서 예외를 포함한 전체 현실을 본다. 지난 해 드러난 김종익 등에 대한 총리실·청와대의 불법사찰은 사찰을 당한 개인에게만 피해를 준 작은 돌출사건처럼 보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속을 훤히 드러내 보인 사건이었다. 김종익 개인과 그의 가족에게 집약된 고통은 이 정부가 감추려 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국가권력의 위법적인 권력행사로 인해 국민이 겪는 고통의 심도와 그 의미는 결코 산술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이기에 김종익 한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겪어온 고통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모두 합한 것보다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결국 이명박 정부 정당성의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릴 뇌관이 될 수도 있다. 1974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으로

사퇴까지 한 것은 닉슨 지휘하의 백악관이 주거침입, 도둑질, 사찰, 도청 등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 자신이 계속되는 거짓말과 은폐공작에 가담하는 등 어떤 이유로도 그러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간인 사찰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어 총리실이 사건을 어떻게 기획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누구의 지시하에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제대로 드러나기라도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힘으로는 버틸 수 있어도 도덕적으로는 하루도 지탱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대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로 줄임)은 김종익 등 민간인을 비롯해 박근혜 남경필 등 여당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 중 호남 인사, 노조 관계자, 언론인,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사찰했다. 그중 국민은행 퇴직자로 구성된 협력업체인 (주)KB한마음 사장 김종익이 촛불시위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을 빌미로 모회사인 국민은행에 압력을 넣는 한편, 아직 유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인 그를 회사에서 내몰고 그의 소유 주식을 포기하게 했으며, 공금횡령과 대통령명예훼손 혐의를 씌어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동작경찰서는 총리실의 지시 공문을 받아 그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고, 무혐의 의견서를 작성한 수사관이 교체되는 국절을 겪은 끝에 결국 동영상과 관련된 명예훼손만을 들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수개월을 끝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¹ 이에 김종익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김종익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총리실이 진행한 불법적인 사찰의 전모를 알게 되어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이 사찰사건은 작년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마침내 여론에 밀린 총리실이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에서도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